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조속한 통과 요청 ”	1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촉구	1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팔걷어... 원주환경청장 ...	2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권혁열(강릉) 도의장	3
江原日報	21면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장	3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3
江原日報	15면	평창군행정동우회 정례회의	4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김씨 신년하례회 개최	4
江原日報	10면	춘천예술촌 1기 입주작가전 ‘ 상춘십곡 ’ 개막	5
백세시대	온라인	대한노인회 강원 인제군지회, 2023년 산불방지 노인 감시...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4. 군사규제완화 첫 ...	7
江原日報	01면	강원도 · 충북 · 경북 연대해 신산업 '제론테크' 키운다	8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온라인	관광화훼산업 육성, 강원 화훼농업 6차산업 전환 추진	9
뉴스투나잇	온라인	강원도, ‘ 봄 산불방지 대책 ’ 본격 추진	11
G1방송	온라인	8군단 해체 확정..지역 주민 '우려'	12
KBS 춘천	온라인	“ 그물 끊고 조업 방해 ” ...강원 · 경북 바다 갈등 심화	1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올해 축산 분야에 561억 원 투자	14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교육청 437명 인사 단행...학력신장 · 교육활성화 드라이...	15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 북평선 관광지 연계 도시철도 전환 검토	16
江原日報	12면	"정동진IC · 톨게이트 건설 추진"	17
江原日報	01면	GTX 춘천 연결 6월 판가름 원주 연장은 미뤄질 가능성	18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서고속화철도 춘천구간 지하화 반발 지속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난방비 민심' 여전히 들끓는다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스키장 리프트 안전관리 만전을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2

KBS 춘천

2023년 02월 01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조속한 통과 요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 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특위는 이전에 지적됐던 안전과 헬기 소음,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기준 강화와 공법 보완 등을 통해 재보완 사항이 해결됐고 40년 숙원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순정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종합 02면

도의회,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촉구

'오색삭도특위' 원주환경청 방문

재보완사항 해결 강조 처리 요청

환경단체는 오늘 반대 집회 예고

속보=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 특별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본보 2022년 12월29일자 4면·지난달 26일자 1면 보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말 양양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색삭도설치 특위는 1일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앞서 보완 단계에서 지적된 헬기소음,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 기준 강화를 비롯해 가설삭도 공법 병행, 전기동력 운영 등이 원천 해결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가 선정한 국가시범사업인 만큼 조속한 결단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40년 지역 숙원사업임을 재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환 청장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종호 위원장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조기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별 법령에 따른 11개 인허가 절차를 올해 안에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6년이다. 사업비는 900억~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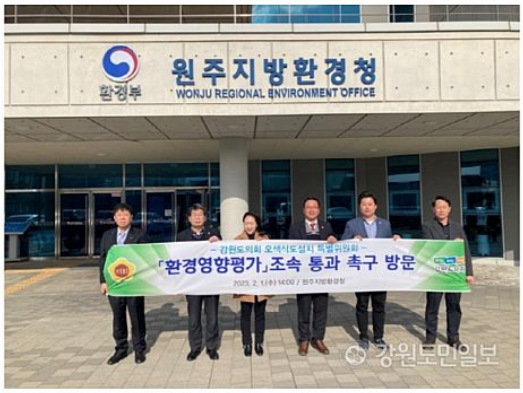
한편 환경단체는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1일 (수)
정치

강원도의회,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팔걷어… 원주환경청장 만나 협조 요청

이설화



▲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진종호)가 1일 원주환경청에 방문해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원주환경청을 찾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진종호 특위위원장과 하석균(원주)·김용래(강릉)·이지영(비례) 특위 위원은 1일 김정환 원주환경청장과 간담을 가졌다. 지난달 4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김 청장을 만나 평가 통과를 요청한 데 이은 재요청이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가 선정한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환경단체의 여론도 있고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장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법적 답변 기한보다 결과가 이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진종호)가 1일 원주환경청에 방문해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양양군과 원주환경청 등은 산양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통한 서식종 활동반경 조사를 문헌으로 대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조율해왔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뒤, 원주환경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재보완 등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표류 상태다.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인물동정 11면

권혁열(강릉)도의장은 2일 오전11시20분 춘천오라호텔베어스에서 열리는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인물동정 21면

◇권혁열강원도의장은 2일

오전 11시20분 춘천 오라호텔 베어스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인물동정 16면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일 오전 9시30분 양양문화복지관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지회장 선거가 열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지역 15면

평창군행정동우회 정례회의 평창군행정동우회 정례회의가 1일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이경식 평창지방행정동우회 회장, 지광천 도의원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1일 (수)
지역

강릉김씨 신년하례회 개최

이연제

2023 계묘년 강릉김씨 신녀하례회가 1일 강릉농협에서 김복기 대종회장과 김용래 도의원, 김진덕 원로부회장을 비롯해 대종회원, 명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 강릉김씨대종회(회장 김복기) 신녀하례회가 1일 강릉농협에서 김용래 도의원과 김진덕 원로부회장을 비롯해 대종회원, 명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 강릉김씨대종회(회장 김복기) 신녀하례회가 1일 강릉농협에서 김용래 도의원과 김진덕 원로부회장을 비롯해 대종회원, 명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dusdn256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지역 10면

◇춘천 예술촌 입주작가전 '상춘십곡-봄을 환대하라'가 1일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권은석 춘천문화원장, 박관희·정재웅 도의원, 윤민섭·이희자 시의원을 비롯한 입주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덕기자

춘천예술촌 1기 입주작가전 '상춘십곡' 개막

10인 작품 200여점 공개

【춘천】춘천예술촌 1기 입주작가전 '상춘십곡-봄을 환대하라'가 1일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춘천예술촌 입주작가이기도 한 조진희 리코디스트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개막식에서는 입주작가 10인의 작품 200여점이 공개됐다.

옛 기무부대 터 관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춘천예술촌에 지난해 입주한 작가들은 '봄을 환대할 수 있는 열 가지 방법'에 대해 저마다의 세계를 풀어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4, 5일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하며 주말에는 수화 도슨트도 운영한다.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전시 주제에는 춘천의 상징인 봄과 더불어 우리 일상의 젊음, 생동, 인생이 담겨 있다. 독창적인 창작 의지로 작업에 매진해 온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계묘년 특별한 봄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옛 기무부대 관사를 리모델링해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춘천예술촌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춘천시립미술관도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자 춘천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백세시대

2023년 02월 01일 (수)

대한노인회 강원 인제군지회, 2023년 산불방지 노인 감시단 발대식

박아영 기자

인제군지회가 2023년 산불방지 노인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강원 인제군지회(지회장 김양준)는 1월 30일 인제군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2023년 산불방지 노인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이춘만 군의장, 엄윤순 도의원, 조춘식 군의회 부의장, 김도형·신동성·김재규·이수현·황현희 군의원과 각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인제군지회 김양준 지회장을 비롯해 지회 임원, 88개소 경로당 회장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했다.

산불방지 노인감시단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

식전행사로 산불예방 동영상을 시청 한 후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어 장화영 수석부회장의 산불방지 노인지킴이활동 결의문 낭독 후, 결의문을 최상기 군수에게 전달했다.

김양준 지회장은 "각 경로당 회장 및 경로당 회원께서 봄철 산불예방 활동기간 동안 철저하게 활동을 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했다.

이후 산불 방지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배부와 공지사항 안내를 전달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4. 군사규제완화 첫 시험대

정승환

민통선 5㎞ 북상 시 426㎢ 활용 가능, 최초 국방특례 주목
강원도 5개 시군 접경지 포함
재산권 제한·편의시설 부족 불편
강특법 개정 심의과정 험로 예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부문은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묶여있는 중첩규제 혁파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끌어올리는 것이 군사규제완화 특례 부문 가운데 핵심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이 3분의 2가량을 차지, 군사보호구역에선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편의시설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민통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군사분계선의 이남 5㎞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뒀다.

민통선을 5㎞ 이내로 줄이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7배인 426.45㎢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민통선 북쪽에 있는 민북마을도 11곳에서 9곳으로 줄어 든다. 제한보호구역을 끌어올리면 접경지역 내 약 400㎢의 규제가 완화된다. 민통선 면적은 철원군이 100.79㎢로 가장 넓다.

민통선은 1954년 미군에 의해 27㎞ 이내로 그어졌다가 1993년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 15㎞, 2007년 10㎞로 차츰 북상돼 왔다.

또,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와 관련,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처분계획 수립 의무 부여와 무상 대부·양여 특례, 지자체 오염정화 우선 시행 특례 등을 담았다. 이 같은 군사규제 완화를 비롯한 국방분야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험대이다. 지방자치법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 지자체 처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특별법에도 국방 관련 특례는 제외됐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국방 특례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없어 향후 심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특례반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01일 (수)
종합 01면

강원도·충북·경북 연대해 신산업 '제론테크' 키운다

〈Gerontech:노화+기술〉

道 2,324억 투입 초광역 협력
디지털 의료기술 시너지 기대

강원도가 충북, 경북과 연대해 '제론테크'(Gerontech·노인학과 과학기술의 합성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제론테크란 노인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개념으로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324억원을 투입해 '제론테크 기반 스마트리빙 중부내륙권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도로 추진되며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돼 1년간 전문가 용역과 정부 컨설팅 등을 거쳐 정교하게 내용을 가다듬었다.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등 비대면 의료,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충북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와 더마융복합의료기기(미용) 등에, 경북은 재활의료기기, 웨어러블 진단키트 산업에 특화돼 있다.

경계를 맞댄 강원, 충북, 경북이 모두 첨단의료산업을 육성 중인 데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만큼 산업적·지리적 측면에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고령화 비율이 높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 태백·영월, 충북 괴산·단양, 경북 봉화·예천에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간 제론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을 벌인다.

다만 지난해 연말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지는 못했다. 소요 재원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균형위를 설득해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02월 01일 (수)
종합

관광화훼산업 육성, 강원 화훼농업 6차산업 전환 추진

황만호 기자

청년 농업인 중심 '꽃 명소공간' 및 '체험장·꽃카페' 조성

철원 고석정 꽃밭

강원도는 화훼농업 6차산업 전환과, 꽃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화훼단지조성', '체험장', '꽃 카페' 등 관광화훼산업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화훼산업은 고령화, 인력부족, 수출감소,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규모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관광화훼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화훼축제, 체험장 등 방문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제 가을꽃 축제

이에, 강원도는 생산·판매 중심 화훼산업 구조를 체험·관광화훼로 정책전환, 다변화를 위해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공모)' 2개 사업을 추진한다.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역별 관광지·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경관지구 조성용 '꽃묘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올해 1개소, 200백만원을 추진하여 관수·관비시설, 온·냉방시설, 보광시설, 베드시설, 작업장 등을 지원한다.

고성 하늬팜 라벤더 축제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지원사업'은 화훼 재배농장 인근 체험시설, 꽃 카페를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본 사업은 총 5개소, 500백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교육장, 꽃 판매대, 소규모 꽃카페 등의 조성을 추진한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만39세 이하 청년(승계) 농업인에게는 우선선정 기회를 부여해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에 청년인력을 유입할 계획이다.

평창 백일홍 축제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2월 17일까지, 강원도 공고문에 개시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시군 원예업무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심의는 전문 평가심사단 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철원 고석정 꽃밭', '평창 백일홍 축제 '처럼 꽃 명소공간 조성을 통해 보고 즐기는 관광화훼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화훼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체험·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화훼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만호 기자 gwnews@daum.net

뉴스투나잇

2023년 02월 01일 (수)
강원

강원도,'봄 산불방지 대책'본격 추진

2월 1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김태형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실

[뉴스투나잇=김태형]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계속되는 동해안권역의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2월 1일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동해안권의 동시다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동해안권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도에서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9대의 배치를 완료했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조기 선발·배치하는 등 봄철 산불대응을 위한 채비를 이미 마쳤으며, 1월 26일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재로 도내 4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강원도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15일까지'183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0%),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산불(19%) 등의 원인으로 연평균 75건, 1,293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형화, 연중화 추세에 있다.

도는 산불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원(2,732명)과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을 전진 배치하여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64명, 파쇄기 103대)과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등을 통해 산불원인 제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산불진화 주력 자원인 산불 진화헬기 33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특히, 산불진화임차헬기를 지난해 6대에서 9대로 3대를 증편했으며, 효율적 공중진화지휘를 위해 권역별로 운영하던 방식을 도에서 총괄 운영 및 지휘한다.

또한, '22년 평균 175일에서'23년에는 40여일이 늘어난 219일을 운영함으로써 날로 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불재난 특별교부세로 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산불대응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산불진화 민간 임차헬기 사고를 계기로 보안과 민간인 통제 등에 취약한 헬기 임시계류장의 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생활권 밀착형 홍보와 소각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쇄기, 이동식물주머니,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담수지결빙방지장치 등 진화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으로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의 현장지휘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확대 추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단계별 연접 시?군의 진화자원을 상호지원하여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년 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행 시 인화물 소지금지, 생활권 쓰레기 소각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등 불씨관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는 한편,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형산불 사전차단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G1방송
2023년 02월 01일 (수)
강원

8군단 해체 확정..지역 주민 '우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앵커]
강원도 동부전선과 동해안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군단이 오는 6월 말에 해체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병력 감축에 따른 지역 상경기 위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동해안 6개 시.군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8군단이 6월 말 해체됩니다.

작년까지 8군단 해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도 8군단 운영 예산을 6월까지만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군 감축과 현역자원 부족 현상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첨단 경계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군단 해체에 대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안보 위협입니다.

재작년 2월 이른바 '오리발 귀순'에 이어 작년 1월에는 '철책 월북' 등 경계 실패가 잇따르면서 군단 해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8군단이 해체되면, 3군단이 동해안 6개 시.군의 지휘 책임까지 맡아야 합니다.

지역 경기가 위축될거란 우려도 큽니다.

군단 해체로 대규모의 군인과 가족이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리는 만약 8군단이 없어진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반드시 8군단이 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8군단이 해체되더라도 예하부대가 군단 사령부가 있는 양양으로 이전하는 등 주둔 병력 축소는 제한적이고,

첨단 감시 장비와 무기 체계를 보강하는 만큼 안보 누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KBS 춘천

2023년 02월 01일 (수)
강원

“그물 끊고 조업 방해”…강원·경북 바다 갈등 심화

[앵커]

최근 경북지역 일부 어선들이 대게를 잡기 위해 강원도까지 원정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어민들은 원정 조업 때문에 그물이 훼손되고 어족자원까지 고갈된다며 조업 금지구역 설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로 대게를 잡는 이 어선은 최근 그물의 약 80%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민들은 강원도로 원정 조업을 온 경북 근해 통발어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발을 끌어올리면서 강원도 어민이 설치한 그물과 뒤엉키면, 아예 끊어버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최재호/어민 : "(그물이) 올라오니까 (경북 근해어선이) 그냥 다 잘라 내버린다는 거죠. 지금 바다 배들이 잃어버린 (그물) 틀 수가 보통 한 척에 일고여덟 틀씩 다 잃어버렸어요."]

훼손된 그물을 새로 사들여 조립하는 데 석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조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어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어구 피해와 함께 자칫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수심 430미터가 안 되는 경북 앞바다에서는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조업이 1년 내내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에는 이런 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조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어민들은 강원 동해안에도 마찬가지로 조업 금지구역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심상식/삼척시 임원어촌계장 :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선(조업 제한선)을 그어주면 연안 대게를 잡는 자망 어선들도 어망 손실도 적고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이에 대해 경북지역 근해통발 어민들은 원칙대로 조업 중이라며, 어구 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어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강원도는 원정 조업 온 경북 어선들에 대한 불법 조업 여부 단속과 함께, 근해통발 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KBS 춘천

2023년 02월 01일 (수)
강원

강원도, 올해 축산 분야에 561억 원 투자

강원도가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6개 시책 사업에 561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축개량 체계 구축에 63억 원,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에 13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관리에 142억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에 82억 원을 투자합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사회

도교육청 437명 인사 단행...학력신장·교육활성화 드라이브

정민엽

원주·동해 등 6곳 교육장 교체
초대 정책국장 후보 2명 압축
교육현장 이동 직원 반발 과제

강원도교육청이 1일 이병철 공보담당관을 강원진로교육원장으로, 김상혁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을 후임 공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교육공무원 4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장은 원주·동해·삼척·홍천·정선·화천 등 6곳이 교체됐다. 공석이었던 도교육청 부대변인에는 김지영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가 임명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취임 이후 두번째 인사를 통해 자신의 공약인 학력 신장과 학교 교육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이인범 도교육청 체육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강원체고 교장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더나은학력지원관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담당한 심영택 더나은학력담당 장학관을 임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신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임명된 고등학교 교장들의 경우 일선에서 학력신장을 견인해줄 만한 분들로 선택했다"면서 "엘리트 체육 발전도 함께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던 49명을 일선 학교·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조직을 줄이고 일선 교육현장의 조직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책 수행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감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행정직렬이 맡게 될 초대 정책국장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국장 후보는 박옥녀 춘천교육문화관장과 유선종 전 도교육청 안전담당관 두명으로 압축됐다.

도교육청은 다음주 중 인사를 단행하고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지역 12면

동해 북평선 관광지 연계 도시철도 전환 검토

물동량 감소 등 선제적 대응

산업철도로 개통된지 56년 된 동해시 북평선이 물동량 감소로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광 도시철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50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부터 '북평선 철도 노선 활용방안 등 경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 오는 12월까지 북평선의 도시철도 전환에 따른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선 삼화역을 출발해 북삼동 아파트 인구밀집지역 도심지를 통과, 동해역까지 총연장 6.4㎞인 북평선 철도 노선의 물동량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우선 장래 활용방안 연구와 함께 경제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북평선이 물동량 감소에 따른 향후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평선 물동량 수요 감소시 육상 또는 타 철도 등을 이용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북평선 폐선을 이용한 권역별 관광지 등과 연계해 트램(도시철도)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해 예산을 배정한데 이어 지난 1월 용역을 발주, 오는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삼화역~동해역 간 시멘트와 시멘트부원료(무연탄 등)를 싣고 매일 왕복 8회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시멘트공장과 동해항 간에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운송되고 있어 철도를 통한 물동량이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전인수 jintru@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지역 12면

"정동진IC·톨게이트 건설 추진"

강릉시 '권성동 의원 초청 현안보고회'서 예산 건의

【강릉】강릉시가 동해고속도로 정동진IC 및 TG(톨게이트)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 초청 현안보고회'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권 의원에게 강릉 남부권 현안이었던 정동진IC와 TG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는 정동진이 국내 대표 일출 명소임에도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남강릉 또는 옥계 나들목을 거쳐 차량으로 20분 이상을 우회해야 해 시간적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옥계IC를 이용할 경우 비좁은 고갯길을 오가며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남강릉IC를 통과하면 농어촌도로에 경운기·이륜차 등과 겹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정동진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남부권 관광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 초청 강릉시 현안보고회가 1일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김홍규 시장을 비롯해 김종욱 강릉부시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시는 ITS 세계총회 개최지 역의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구축,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지정체 구간 해소와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고속도로 개통 당시인 2004년에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동진IC 개설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20년이 경과했다. 시는 올 초 한국도로공사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강릉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 및 상징성을 위해 전 국민의 인기 일출 명소인 정동진IC 개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도 7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강릉시청부터 강동면 상시동리까지 7.65㎞ 구간은 국도 7호선 중 유일한 2차선 구간으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민선 8기 들어 강릉시가 새롭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그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종합 01면

GTX 춘천 연결 6월 판가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주 연장은 미뤄질 가능성

국토부 연구용역 상반기 완료
춘천 연장 경제·정책성 높아
원주는 GTX-D 연결 검토중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의 춘천 연장이 올 6월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GTX 춘천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원주권 연장은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B 춘천 연장계획이 포함돼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GTX 연장계획, 신규 노선 확충계획을 종합 분석하는 작업으로 6월께 완료된다.

GTX-B 춘천 연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 구간이 기존 경춘선 구간을 활용, 남양주 마석~춘천(55.7㎞)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3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대~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마석~춘천을 고속으로 직결, 기존 ITX에 비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GTX-B를 경기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근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6월 춘천 연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파주~동탄을 가로지르는 GTX-A의 원주 연장의 경우 이번 용역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신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천을 지나 여주까지 연결 가능성이 있는 GTX-D의 원주 연장을 검토 중이다.

다만 GTX-D는 노선을 비롯해 사업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주권 연장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GTX의 춘천, 원주 연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지역 09면

동서고속화철도 춘천구간 지하화 반발 지속

춘천시, 보름간 주민 의견 청취

재산권 침해·공사방식 우려

강북역사 신설 촉구도 여전

속보=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중 춘천구간(14㎞) 전체 지하화가 추진(본지 2022년 11월 28일자 1면 등)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지난달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중 1공구(근화동~신북읍 산천리·7.399㎞)와 7공구(인제군 북면~고성군 토성면·14.065㎞) 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열람 공고를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약 보름간 청취했다.

1공구의 경우 근화동과 중도동, 우두동, 사농동, 신동, 신북읍 율문리·산천리를 거친다. 이 중 우두동과 사농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 30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주민들 대부분은 재산권 침해, 공사방식에 대해 반발했다. 한 주민은 "공사가 지하로 진행돼 지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행정절차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개발행위 조차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의견서를 취합해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 2공구(춘천시 신북읍 산천리~화천군 간동면 간척리·11.224㎞) 춘천지역 구간도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 신북읍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신북읍 발산리 일대에 강북역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역사 조성이 어렵다면 철도 차량들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기지창이라도 설치해 유입되는 인구라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용기 신북읍번영회장은 "지상으로 올려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번영회 차원에서라도 의견을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도청강북추진위원회도 지난달 김진태 지사를 만나 강북지역 발전 방안으로 강북역사 신설을 제안했다.

1공구 공사 업체는 최근 한진중공업으로 선정됐으며 국가철도공단은 2공구 실시설계안을 올 상반기 쯤 확정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사업비 2조4377억원을 들여 춘천~속초 93.7㎞를 잇는 단설철도 건설사업이다.

이승은 ssnne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난방비 민심' 여전히 들끓는다

-이달 고지서 더 시름, 겨울 석달 에너지 대책 허술해서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난방비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1월 26일 내놓은 에너지 지원책이 빈곤층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2월 1일 추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1월에 이어 이달 난방비 청구서 역시 곧 예고돼 있어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앞서 1월 30일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까지 나왔지만, 아직 중산층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 비용 문제 해소를 응급 및 장단기 대책까지 체계적으로 내놓되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 정책조차도 여론 지적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하는 등 대증요법으로 처방해서도 곤란합니다.

대다수 시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거용 난방비이지만 당장 생계와 직결되기에 어쩔 수 없이 난방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난방과 불을 많이 쓰는 직종에 부담이 가중된 만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와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당장 농업계와 자영업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키우려면 적정한 난방이 필수인 시설 재배 농가, 손님을 맞기 위해 난방과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업주는 혹독한 겨울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한 시기에 2배 가까운 난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난방을 할 수 없기에 한 푼이라도 난방비를 줄이려는 고통이 큽니다. 단열에 취약해 냉골인 실내에서 방한 외투를 입고 지내고, 폐박스로 현관 입구를 가려 보온하는 등 난방문제 관련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엔 연료가 필수입니다. 음식, 옷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에너지 비용 급등이 예고된 상태인데도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기 전에 비상 상황이 될 에너지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됐어야 합니다. 타격이 더 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나왔어야 하고 단열 대책을 세우도록 장려하는 사업이 시행됐어야 마땅합니다. 경제가 고속성장 과정이라면 감당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경기 악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휘청이는 시기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스키장 리프트 안전관리 만전을

-도내 절반 20년 이상 노후, 정밀 검사 필요

강원 겨울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잇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노후한 시설이 많아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스키장은 주변 상권 활성화와 계절 특수를 이끄는 소중한 관광 자산입니다. 더욱 정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총 18건으로, 그중 14건이 도내 스키장에서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 이용객 70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20분 만에 구조했지만, 탑승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한 스키장 슬로프에서도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해 54명이 고립됐다가 약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도 1시간가량 멈춰서 54명이 공중에 고립됐습니다.

리프트 멈춤 사고는 이용객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저체온증을 일으켜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스키어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내 스키장 리프트 중 절반이 20년 이상 노후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키장 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프트는 총 66대입니다. 그중 65대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20년 이상 리프트는 34대로 절반 이상인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의 경우, 보다 정밀한 점검이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 검사 규정에 따르면 리프트는 연 1회 정기 검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한다고 해도 리프트를 분해하는 정밀 검사가 아니어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키장 노후 궤도시설 및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키장 측은 고장 날 때까지 해당 부품 등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사고는 스키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차원을 넘어, 강원 관광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멈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월31일 양양에서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돼 '균형발전특별법(안)'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연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국무회의의 의지와는 달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만 했을 뿐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해를 넘겼으며 올 1월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딱 멈춰 서 있는 셈이다.

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이 가능하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물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모두 진척이 없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특구 시행도 2025년으로 늦춰진다.

비수도권 지역 전체가 저출산·고령화·산업공동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 법안이다.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늦어질수록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 국회는 하루라도 신속히 이 법안을 심의·처리하길 바란다.